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03
----------	------

발의연월일 : 2025. 1. 7.

발 의 자 : 김영배 · 이기현 · 권향엽
이학영 · 문금주 · 이훈기
김태년 · 김태선 · 한정애
윤후덕 · 서미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 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

바.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이란 공무원·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사인이 공무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이거나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형집행 및 그 밖의 제재는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자기나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

나. 자기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

다. 자기나 제3자를 협박 또는 강요할 목적

라.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

2. “고문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

조에 따른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고문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3조(유족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의한 고문피해자의 상속인(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구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절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향후 고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이익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고문피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은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제7조(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①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명예회복, 구제·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부 권고안 작성
3. 고문에 관한 제보의 접수 및 처리
4.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5. 고문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6.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심의 및 결정
7.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필요한 기금 등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9.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국내·국제·외국기

구와의 협력

10. 그 밖에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직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임위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사무위원과 상임조사위원 각 1명씩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고문방지 교육) 위원회는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고문피해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고문피해의 실태와 고문피해자 구제현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고문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고문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실태보고서로 작성하여 연 1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①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

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고문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문피해자 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문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은 이 법에

다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진다.

제13조(해외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이하 이 조에서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제11조에 따른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신고처(이하 이 조에서 “신고처”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의 설치 여부와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신고처 설치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처의 설치 및 공고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문피해자의 장해등급 분류) ① 위원회는 보상·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고문피해자의 장해등급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피해자가 장해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분류 및 재분류와 신체검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긴급구제)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고문피해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긴급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
 3. 그 밖에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16조(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의료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문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

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료치유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법률지원)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또는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상금)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 다음 각 목의 금

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애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료지원금) ①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고문으로 상이를 입은 고문피해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상금등의 지급 및 지원의 이용 신청) ①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6조의 상담·치료프로그램, 제17조의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 및 제18조의 법률지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24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8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관한 소송은 보상·지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보상·지원 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을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고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문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보상·지원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보상된 경우
3. 고문피해와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4. 고문피해와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는 제2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4장 보칙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제공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